

4조원대 광주시금고 누가 맡을까

시의회, 평가 항목·배점 기준 변경 조례 개정 추진

광주은행·국민은행·농협 치열한 경쟁 ... 9월 입찰

4조원대의 광주시 금고 지정을 앞두고 시의회가 일부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등을 변경하기로 했다. 배점 기준 등의 변경에 따라 금융기관별 유·불리가 적지 않은 만큼 그 결과가 초미의 관심을 끈다.

6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조오섭 의원 등 시의원들이 8일부터 열리는 제250회 임시회에 광주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의회가 의원 입법으로 시금고 운영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개정안에서는 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협력사업비를 현금으로 출연하고, 시는 예산 편성과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금고 선정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새로 넣거나 삭제,

또는 조정했다.

주요 평가항목은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대출 및 예금금리, 시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개정안은 우선 대순총당금 적립률(2점) 항목을 삭제했다. 시민이용 편의성과 관련된 영업점포수를 관내(광주)에서 전국 영업망까지 확대했다. 배점도 5점에서 6점으로 상향했다.

OCR(광학적 문자 판독장치)센터 운영 능력과 계획에서는 최근 3년간 자치단체 운영 실적을 새로 추가하고 배점도 2점에서 3점으로 늘렸다. 일부 항목은 배점이 조정됐다.

수시입출금식 예금에 적용하는 금리는

1점에서 2점으로, 전산처리 능력도 5점에서 7점으로 늘었다. 관내 중소기업 대출실적과 계획은 5점에서 3점으로 축소됐다.

이와는 별도로 행자부는 지난해 말 예규변경을 통해 지자체와 협력사업 항목 등을 대폭 완화해 신규 진입 장벽을 허물었다.

현재 시 금고를 맡고 있는 광주은행 관계자는 “개정안은 전국 영업망 포함, 중소기업 대출 점수 축소 등 지방은행에 불리하게 조정된 측면이 있다”며 “일반적인 평가항목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이 할 수 없는 지방은행 만의 기여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오섭 의원은 “행자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해 금고선정의 투명성을 높여자는 취지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광주시는 조례가 개정되면 오는 9월께 본격적인 시금고 지정 입찰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 시금고는 1969년부터 광주은행 독점체제로 운영됐다가 2012년 복수체제로 전환됐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부를 관리할 제1금고로 광주은행을, 특별회계 일부를 관리할 제2금고로 KB국민은행이 선정됐다. 1금고는 2012년 기준 전체 예산 3조5629억원 중 3조4776억원을, 2금고는 853억원을 맡았다.

당시 입찰에는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이 경쟁했다. 올해도 이 은행이 유치전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은행은 당시 지역협력사업비로 연간 25억원을, 국민은행은 연간 5억원을 제시했다.

올해 예산액 기준으로 일반회계는 3조5057억원, 17개 분야 특별회계와 공기업 기금 등은 9323억원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인화학교 터 활용방안 13일 결정되나

장애인 직업교육시설·수련원·복지관 놓고 검토

영화 ‘도가니’의 실제 무대였던 광주 인화학교 터 활용방안이 세 가지로 압축된 가운데 오는 13일 열릴 최종 회의에서 큰 틀의 가닥이 추려질 예정이다.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직업교육시설과 수련원, 복지관 등 3가지 방안으로 압축됐으며, 이 중 하나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인화학교 부지 활용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3일 최종 회의를 열고 3가지 방안을 놓고 장단점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TF에서 제시된 20여개 방안을 놓고 논의한 결과 장애인에 위한 직업교육시설, 연수원 형태의 수련시설, 복지관을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올랐다.

직업교육시설은 멀지 않은 전남 함평에 비슷한 시설이 있고, 수련시설이나 복지관도 건립·운영비 마련 등 재원마련이 걸림돌로 예상된다.

시는 TF 회의를 한 뒤 최종 방안 또는 3개 방안별 건립 효과 등을 분석하는 용역을 거칠 방침이다.

새롭게 건립되는 시설에는 ‘인화학교 사태’를 기억하게 하는 기념물을 만들거나 전시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부지를

매각하거나 청각장애 학교를 다시 건립하자는 의견도 일부에서는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폭넓은 인사로 TF를 구성해 금기가 없다 싶을 만큼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거의 아픔을 씻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나오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화학교는 일부 교직원들의 청각장애 학생 성폭행 등 실화를 담은 공지역 작가의 소설 ‘도가니’가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전국을 분노로 들끓게 했다.

학교는 2011년 문을 닫았지만 법인 청산절차는 퇴직금 소송 등이 맞물리면서 2014년 마무리됐다.

시는 지난 2월 시의회, 시교육청, 옛 인화학교 대책위, 동문,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20명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현장 방문, 회의를 통해 시로 귀속된 부지 활용방안을 논의해왔다.

한편, 광주 광산구 삼기동 옛 인화학교는 부지 1만8073㎡, 건물 연면적 8705㎡에 이른다. 감정가는 부지 20억원, 건축물 35억원 안팎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정책자문관 견제 장치 마련

주경님 시의원, 조례 발의

부당한 시정개입 의혹과 구설을 낳은 광주 시 정책자문관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주경님 의원은 6일 정책자문관 설치 근거를 조례에 뒤 의회 견제를 강화하고자 ‘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정책자문관을 10명 이내 비상임으로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사무공간 제공 등 특혜를 없도록 했으며 보안 유지 등 준수사항도 담았다.

정책자문관은 정보누설, 금품·향응 수수, 부당한 알선·청탁을 해서는 안 되며 보안·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례안은 또 운영대장을 마련해 자문내용 등을 기록으로 남기고 자료 요구와 제출 내용, 수단 지급 내용, 운영 결과를 매년 평가하도록 했다. /최권일기자 cki@



“위안부합의 폐기하라” 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38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바위처럼’ 노래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해남공공산후조리원 서비스 만족” 92%

전남도, 이용자 설문조사

해남공공산후조리원 전체 이용자 중 92%가 만족했다고 나타났다. 또 이용자 중 92% 이상이 공공산후조리원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6월 “지난 5월까지 9개월 동안 이용자 189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24명이 장애인 산모나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의 이유로 70%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자는 유형별로 세 자녀 이상 다둥이 79명(64%), 다문화 30명(24%), 5·18 국가유공자 10명(8%), 기타(2%) 등의 순이었다.

거주지별로는 해남군 관내 거주자가 절반이 조금 넘는 51%, 1시간 이내 인근 시군 거주자 43%, 기타 지역 거주자 6%였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6개 항목 모두 92%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해 시설 운영 전반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항목별 만족 답변은 의료진 친절도 98%, 신생아 감염관리 99%, 산후조리 프로그램 92%, 청결상태 95%, 편의시설 92%, 산모 식사 94% 등이다. 해남공공산후조리원은 올해 12월까지 67명이 예약돼 산모들의 입실 경쟁이 높다. 정부에서 승인한 전국 최초의 공공 산후조리원인데도 2주 이용 요금에 154만원으로 인근 대도시보다 30%가량 낮기 때문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공공기관 규모·재정건전성 강화

광주도시공사 부채 147%로 ↓

김대중컨벤션센터 흑자 전환

민선 6기 들어 광주시 공공기관의 규모와 재정 건전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광주시의 공공기관 업무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6개 공공기관 총사업 규모는 7365억원으로 2013년(4969억원)보다 48.2% 늘었다.

같은 기간 고용인력은 1858명에서 2358명으로 증가했으며, 시 지원액 비중은 37.3%에서 28.4%로 낮아져 재정여건 개선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됐다.

광주도시공사는 설립 이후 최대인 28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지난해 기록했고 부채비율은 2014년 196%에서 지난해 147%로 떨어졌다.

김대중컨벤션센터도 당기순이익 1억4200만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과 광주형 도시재생사업 모델 개발, 영세 소상공인 금융 지원,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등 공공부문 사업도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도시철도공사 328명, 김대중컨벤션센터 70명 등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한 것도 성과로 꼽혔다.

시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1단계 사업을 통해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을 광주전남연구원으로 통합하는 등 23개 기관의 조

직재편, 업무 효율화 개선과제를 수행해 행정자치부 구조개혁 부문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시는 2단계 목표를 경쟁력 강화로 설정하고 지난 2월부터 시, 기관, 외부 전문가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업무컨설팅에 들어갔다. 시는 기관별 현안 과제 50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공사·공단 성과연봉제와 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다국어 방송 추진, 디자인비엔날레 전담인력 증원 등이 포함됐다. 임원 임기 등 규정 관련 표준화 15건, 유기적 특별채용 금지 등 복리후생 제도 정비 12건도 과제로 남겼다. /최권일기자 cki@

‘이순신대교 해상교량복합사교’ 대응훈련 우수사례 발표

전남도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종합토론회에서 ‘이순신대교 해상교량복합사교’ 대응훈련을 광역지자체 대표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국민안전처가 주관한 이번 종합토론회는 2016 안전한국훈련 성과 및 강령에 이어 우수 훈련사례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을 비롯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경영의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순신대교의 실제 교통 차단에 따른 우회 노선 지정·운영 등 훈련 중점사항, 흐름도, 기관별 역할 분담 등 전반적 훈련 내용을 발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돈도니
생화산만화점

배달전문점
상표등록번호 제 41-0328004호



저렴한
창업비용 가능



안정적인 매출
<트렌트 지류 없음>



돈도니가 광주에서 이뤄낸 4개월의 성공신화!

OPEN!
2016년 1월 14일

광주 삼촌점
월 4,300만원

OPEN!
2016년 4월 7일

광주 수완점
월 3,200만원

OPEN!
2016년 6월 9일

광주 진월점
일매출 120만원

24시간 가맹상담 문의
1544-9217

광주 첨단점
7월 OPEN 예정!

가맹개설 조건		표준연적 - 15평
인테리어	포스시스템	교육비
간판&시트지	유니폼	계약이행보증금
주방기구	판촉물	초도물품
주방비품	가맹비	오โต바이

= 3,695만원으로 창업가능!

* 상기 내용은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www.DONDONI.co.kr 전국 가맹현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